與野, '대법 현장검증' '욕설문자' 대립에 국정운영은 뒷전

국정감사 4일차

법사위, 감사원 국감 전부터 대립
대법 재판기록 열람은 '허위사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
항공우주청·원자력안전委 관련
질의 못한 채 파행… 비공개 진행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하기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기록을 보러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냐"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게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췄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나.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제조업 공동화 대응책으로 '생산 세액공제' 제시

美 관세정책 대응 민생현장 간담회
위험 처한 모든 업종 지원 대상
시장 친화 인센티브 제도 마련

국민의힘이 16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자도차 부품업체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생산 세액공제를 제안했다.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 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낼 때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생산 세액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첫째,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와중에 산업을 지탱하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에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공언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박태홍 기자

구윤철 "구조적 전환 대응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G20 회의, IMF·WB 연차총회 참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무대 연설에서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전략 제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높은 분야 위주의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그의 첫 다자외교 연설이다.

구 부총리는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AI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AI반도체와 제조업 등의 AI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를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체계 고도화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또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채무 재조정과 부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주요 7개국(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한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달 트럼프 방한… 한미·미중회담 전망

북미 정상회담 움직임은 아직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언저리(체류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지난 8월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